
국제학술대회(WEAI) 출장보고서

2025. 7. 23

KDI 재정·사회정책연구부

1 출장 배경 및 목적

□ 출장 배경

- 코로나-19 이후 확대된 경기부양 및 소상공인 지원 목적의 현금성 지원 정책의 효과성 및 개선 방안에 대한 연구 수요가 계속 증가하는 상황
 - 경기부양 목적의 현금성 지원: 상생국민지원금, 상생소비지원금 등
 - 소상공인 대상 지원금: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및 재난지원금, 지역사랑 상품권 등
 - 코로나-19 종료 후에도 소비진작 및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현금성 지원에 대한 논의 지속

- 현금성 지원 정책은 지원 방식에 따라 소비진작 효과 및 수혜집단이 상이할 수 있으므로, 지원 방식별로 정책 효과를 비교 분석하는 연구가 요구됨.
 - 대다수 국민을 대상으로 직접적으로 현금을 지원하는 정책의 소비진작 효과는 고소득 가구보다는 저소득 가구에서 더 크게 나타남(Baker et al, 2023¹); Chetty et al., 2024²).
 - 반면 캐시백 방식의 지원금 정책에는 고소득 가구 등 소비 여력이 큰 소비자 집단을 중심으로 소비 진작 효과가 크게 나타날 가능성이 있음.
 - 국내에서는 다양한 방식의 현금성 지원 정책이 시행된 바 있어, 지원 방식에 따라 효과를 비교하고 정책 개선 방향을 탐색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1) Baker, Scott R., Robert A Farrokhnia, Steffen Meyer, Michaela Pagel, and Constantine Yannelis, "Income, Liquidity, and the Consumption Response to the 2020 Economic Stimulus Payments," *Review of Finance* 27 (6): 2271 - 2304, 2023.

2) Chetty, Rag, John N. Friedman, Michael Stepner, and Opportunity Insights Team, "The Economic Impacts of COVID-19: Evidence from a New Public Database Built Using Private Sector Data," *The Quarterly Journal of Economics* 139 (2): 829-889, 2024.

- KDI에서는 다양한 방식의 현금성 지원 정책의 효과에 대한 여러 정책연구를 수행한 바 있으며, 그간의 연구 결과를 종합하고 후속적인 연구를 추가한다면 지원 방식과 수혜집단 설정에 관한 정책적 함의를 제공할 수 있는 연구가 생산될 것으로 기대됨.
 - 상생소비지원금 사업의 효과 분석(기획재정부, 2022)
 -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의 경제적 효과 분석(행정안전부, 2022)
 -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재난지원금 성과분석 및 개선방안 연구(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2023)
 - 지역사랑상품권 효과 분석 및 지속가능한 발전 방향 모색(행정안전부, 2023)
- 현금성 지원 정책의 효과에 대해서는 해외 경제학계에서도 다수의 저명한 연구가 수행된 만큼, 이론적·실증적 측면에서 해외 우수 전문가의 자문을 구독한다면 추후 연구방향 및 적절한 분석방법의 설정에 매우 유익할 것으로 예상됨.

□ 출장 목적

- 이상의 출장 배경을 바탕으로, 저명한 국제 학술대회에 참석하여 해외의 학자와 우수 연구기관에 국내 사례에 대한 연구 결과를 공유하고, 토론 및 자문을 바탕으로 정책 개선 방향 및 추후 정책 연구 주제를 탐색하고자 함.
- 또한 국제학술대회에 참석한 경제학 제 분야 학회의 학술회의 세션에 참석하고 최신 연구동향 및 분석방법을 파악하려 함.

2 출장 개요

□ 출장지 및 기간

- 출장지: 미국 샌프란시스코

○ 출장기간: 2025년 6월 19일(목) ~ 6월 26일(목) (6박 8일)

□ 출장자 (총 1명)

소속	성명	직위
KDI 재정·사회정책연구부	김민섭	부연구위원

□ 방문기관: 미국 서부 국제경제학회(Western Economic Association International; WEAI)

○ WEAI는 Economic Inquiry 및 Contemporary Economic Policy 등의 저널을 발간하는 등 경제 정책 분야의 논의가 활발한 학회

○ 올해 100번째 학술대회를 개최하는 유서 깊은 학회이며, 세계 각국의 다양한 지역 및 경제학 분야에서 저명한 경제학자가 다수 참석

□ 주요활동: 연구결과 발표 및 학술세션 참석

○ 국내 연구결과 발표 및 해외 전문가로부터 연구·정책 관련 자문 구득

- 발표 세션: Effects of Financial Incentives, Financial Distortions, and Financial Risk Tolerance

- 발표 제목: Stimulating the Economy via Cashback: Evidence from Credit Data in South Korea

○ 학술대회의 주요 학술세션에 참석하고, 가계금융·재정사회정책·불평등 등 관련 주제에 대한 연구 사례 조사 및 토론

- 참석 학술세션: 3. 출장일정 및 4. 활동 내용 참조

3 출장 일정

일자	주요일정(안)
6.19(목)	[11:30~06:30(현지시간)] 인천(ICN) → 샌프란시스코(SFO) 이동
	[06:30~08:00] 샌프란시스코 공항 → 숙소 이동
	[08:00~18:00] 발표자료 작성
6.20(금)	[08:00~12:00] 발표자료 작성
	[14:30~16:15] 학술세션 참석: Minimum Wage
6.21(토)	[08:15~10:00] 학술세션 참석: Blame the Kids? How Children Impact the Labor Market/Investment Decisions of Parents
	[10:15~12:00] 학술세션 참석: Inequality and Careers (CSWEP)
	[14:30~16:15] 워크숍 참석: The Hidden Curriculum: Everything You Weren't Taught in Graduate School About Doing Applied Research
	[18:00~20:00] 발표자료 수정
6.22(일)	[08:15~10:00] 학술세션 참석: Pay Transparency, Quotas, and Remote Work
	[14:30~16:15] 학술세션 참석: Issues in Household Consumption and Savings
	[16:30~19:00] 토론자료 작성
6.23(월)	[08:15~10:00] 학술세션 참석: Topics on Private Education, Fertility, and Economic Development in South Korea
	[12:00~20:00] 토론자료 작성 및 발표 연습
6.24(화)	[08:15~10:00] 학술세션 참석 및 발표: Effects of Financial Incentives, Financial Distortions, and Financial Risk Tolerance
	[10:00(24일)~07:00(25일), 현지시간] 연차휴가
6.25(수)~ 6.26(목)	[07:00~10:00] 숙소 → 샌프란시스코 공항 이동 [10:40(25일, 현지시간)~15:00(26일, 한국시간)] 샌프란시스코(SFO) → 인천(ICN)이동

4 활동 내용

1. 학술세션 참석: Minimum Wage

- 일 시: 2025. 6. 20. (금), 14:30~16:15
- 장 소: San Francisco Marriott Marquis, Juniper
- 발표자: Hayato Kanayama (Waseda University), Seongman Moon (Jeonbuk National University), Ke Lyu (University of Nevada, Reno), Ge Sun (University of Notre Dame)
- 발표1: Who Bears the Cost? High-Frequency Evidence on Minimum Wage Effects and Amenity Pass-Through in Spot Labor Markets
 - 본 연구는 최저임금의 인상이 일용직(스팟워커)의 노동시장에 미치는 단기적인 영향을 실증적으로 추정함.
 - 스팟워커(spot worker): 단발적으로 단시간·단기간 고용 계약을 맺고 즉각적으로 투입되는 고용형태. Spot과 worker의 합성어임.
 - 분석자료: 스팟워커와 고용주 간 근로계약을 중개하는 일본의 민간 플랫폼인 Timee의 계약 매칭 자료를 이용
 - 분석방법: 이중차분법(Difference-in-Differences)
 - 주요결과
 - 최저임금의 영향을 받은 임금구간 내 고용이 2% 감소, 빈 일자리도 감소, 고용감소는 부동산업에서는 이뤄지지 않고 요식업 및 소매업에서 크게 나타났음.
 - 근로시간은 증가: 시장에서 거래되는 노동투입의 총량은 크게 변하지 않았음을 시사
 - 교통비 지원 등 임금 외 복리후생 항목은 거의 변하지 않음.
 - 이상의 결과는 일용직 노동시장에서 최저임금의 변화에 따라 임금 조정이 빠르게 이루어지며, 그에 대한 비용 부담을 근로자의 복리후생 혜택의 감소 없이 사업체가 감당하게 되었음을 시사함.
 - 분석의 한계: 월별 패널데이터 분석이므로 일용직 노동시장의 계절성을 통제할 추가 분석을 수행할 필요
- 발표2: The Effect of Job Stabilization Funds on Employment:

Revisiting the Debate over the Effects of the 2018 Minimum Wage Increase in Korea

- 고용노동부에서는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이 영세 사업주의 경영 여건과 저임금 근로자의 일자리에 미칠 부작용을 완화하기 위하여 일자리안정자금(Job Stabilization Funds; JSF) 사업을 시행한 바 있음.
 - 저임금 근로자를 고용한 30인 미만 사업장의 사업주에게 보조금을 지급하는 사업
- 본 연구는 일자리안정자금 사업이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고용 영향을 완화했는지 여부를 실증분석함.
- 분석방법: 이중차분법 및 삼중차분법을 이용하여 일자리안정자금 정책 대상 사업장인 30인 미만 사업장(처치집단)과 정책대상이 아닌 30인 이상 사업장(통제집단)의 고용 변화를 대조함으로써 JSF의 고용 유지 및 창출 효과를 평가함.
- 분석자료: 고용형태별 근로실태조사, 지역별 고용조사
- 분석결과: 2018년의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은 30인 이상 사업체의 고용에 부정적인 영향을, 30인 미만 사업체의 고용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 것으로 나타남.
 - 고용 유지 효과가 더 강하게 나타났으며, 서비스업 등 일부 산업에서는 고용 증가 효과도 확인
- 분석결과에 대한 의견: 대폭적인 최저임금 인상이 영세 사업체의 고용에 부정적이 아니라 오히려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다는 사실은 매우 놀라움. 원론적인 이론의 예측에 부합하지 않는 결과인 만큼 받아들이기 조심스러운 측면이 있음. 저자는 이를 일자리안정자금의 실효성이 컸기 때문으로 해석함.
 - 본 분석의 처치집단이 실제 처치를 받은 집단이 아니라 지원 대상이 있는 30인 미만 기업 전체라는 점에서, 실제로 처치를 받은 기업의 비율이 얼마나 되는지가 확인될 필요가 있음.
 - 정책 수급 여부가 기업의 자발적 신청을 전제로 하므로, 실제 지원금을 받은 사업장과 전체 30인 미만 사업장의 특성이 유사할지도 의문
- 정책적 함의:
 - 최저임금 인상 충격을 완화하는 데 JSF가 효과적인 완충 장치로 작동함
 - 고용 유지 지원에 중점을 둔 보조금 정책은 단기적으로 유의미한 성과를 낼 수 있음
 - 향후 정책 설계 시, 업종·규모별 차별화된 설계 필요
 - 장기적으로는 보조금 의존성 완화 및 생산성 제고 유인 병행 필요

□ 발표3: How Do Minimum Wages Affect Nonemployer Business Establishments in the United States?

- 미국의 최저임금 인상이 고용원이 없는 자영업자(nonemployer establishments)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 최저임금 인상이 기존 자영업 활동을 위축시키는지 그리고 자영업 전환 유인을 발생시키는지 검토
- 분석자료: 미국 인구조사국(U.S. Census Bureau)이 제공하는 2001년부터 2020년까지의 고용원이 없는 자영업자(Nonemployer Statistics) 데이터
- 분석방법: 인접 주 경계에 위치한 카운티 간의 자영자(고용원이 없는 자영업자) 사업체를 비교하는 이중 고정효과(two-way fixed effects) 분석
- 분석결과
 - 최저임금이 인상되면 자영자 사업체 수가 감소: 최저임금이 1달러 인상 될 경우 사업체 수는 0.5~0.9% 감소
 - 자영업에서 이탈한 자영자는 고용주(고용원이 있는 자영업자)가 되기보다는 임금근로자나 실업상태로 이행하였음: 높은 최저임금이 비고용자에서 고용자로의 전환을 억제하며, 자영업에서 임금근로자 또는 실업상태로의 전환을 촉진
- 정책적 함의
 - 최저임금 인상이 고용된 노동자뿐 아니라 자영업 활동에도 영향을 미침: 이는 영세 자영업자의 규모가 큰 한국의 상황에 시사하는 바 큼. 실제로 최저임금이 크게 인상된 2018년 이후 고용원이 없는 자영업자의 비율이 크게 상승하였음.
 - 따라서 최저임금 정책은 임금근로 노동시장뿐만 아니라 자영업자의 상황 또한 고려하여 설계할 필요

□ 발표4: Impacts of Expected Fertility on Women's Wages: The Effectiveness of Job Protection Policy

- 본 연구는 여성 근로자가 향후 자녀를 가질 가능성(expected fertility)이 있다는 사실이 여성 근로자의 임금에 미치는 영향을 이론적으로 그리고 실증적으로 분석
- 분석 자료: 중국 가족패널조사(China Family Panel Survey; CFPS)
- 분석 방법
 - 이론적 분석: 2기간 모형, 탐색-매칭(search-and-matching)
 - 실증분석: 중국의 1가구 1자녀 정책 폐지로 발생한 출산 가능성 증가를 식별에 이용하는 삼중차분법

- 분석 결과: 1가구 1자녀 정책의 폐지로 여성 근로자의 출산 가능성이 증가하자, (실제로 출산이 실현되기도 전에) 고용주가 여성의 임금을 하향 조정한 것으로 나타남.
- 고용보호가 강한 노동시장에서 부정적 영향이 해고가 아니라 임금 하락으로 나타난 것으로 해석됨.
- 정책적 함의: 한국의 정규직 또한 고용보호가 강한 일자리로 평가되며, 육아휴직 등의 모성보호제도를 통해 출산 이후 고용보호 또한 보장되고 있는 만큼, 본 연구의 맥락과 유사한 현상이 한국에도 나타날 수 있음. 출산을 제고와 여성의 경제활동참가 장려의 경제적, 사회적 중요성이 큰 만큼 출산과 육아로 인해 부당한 대우를 받는 것은 엄격히 금지되어야 하나, 이러한 보호제도가 여성 근로자에게 집중되는 경우 의도치 않게 여성 근로자의 노동시장 성과를 저해할 수 있음. 이러한 우려를 완화하기 위해서는 여성뿐만 아니라 남성 근로자 역시 출산과 육아를 담당하고 육아휴직 등 모성보호제도를 동등하게 이용하도록 유도하는 정책이 요구될 것임.

2. 학술세션 참석: Blame the Kids? How Children Impact the Labor Market/Investment Decisions of Parents

□ 일 시: 2025. 6. 21. (토), 08:15~10:00

□ 장 소: San Francisco Marriott Marquis, Foothill A

□ 발표자: Fu-Min Tseng (National Chung Cheng University, Taiwan), Favour Olarewaju (University of Memphis), Min-Jung Kim (University of Hawaii at Manoa), Ying Li (University of Washington)

□ 발표1: Accelerator or Buffer for Marital Instability: The Role of Children in Marriage

- 본 연구는 자녀가 부부의 이혼 가능성과 주택 구매 결정에 미치는 영향을 실증적으로 분석하여, 자녀가 결혼 안정성의 촉진 요인인지 완충 요인인지를 규명하고자 함.
- 분석자료: 대만 가족동태조사(Panel Study of Family Dynamics, PSFD)
- 분석방법: 이중차분법
- 자녀가 이혼가능성에 미치는 영향: 자녀는 결혼을 유지시키는 일시적인

- 완충 장치 역할을 하지만, 그 효과는 시간이 지나며 사라짐
- 자녀가 있는 부부는 이혼 확률이 평균 약 2% 낮아지지만, 이 효과는 자녀 출생 후 약 9년이 지나면 사라짐 (사춘기 돌입 시기와 맞물림).
- 자녀의 성별 구성(특히 첫 세 자녀 중 아들의 유무)은 이혼 확률에 영향을 주며, 이는 주로 나이든 세대에서만 유의미하게 나타남
- 자녀가 주택구매 가능성에 미치는 영향: 자녀가 있는 경우, 주택 구매 확률이 높아짐
- 자녀가 초등학교를 졸업할 즈음, 자녀의 독립된 공간 수요에 따라 효과가 뚜렷해짐

□ 발표2: Effect of Informal Care on Labor Market Outcomes: A Structural Equations Approach

- 비공식 아동 돌봄과 노인 돌봄(informal care)이 노동시장 성과(취업 여부 및 근로 시간)에 미치는 영향을 실증적으로 분석
- 가족 구성원 간 역할 구분과 노동시장 참여의 trade-off에 주목함.
- 분석자료: 미국 시간 활용 조사(American Time Use Survey; ATUS)
- 분석방법: 구조방정식모형 (Structural Equation Modeling, SEM)
- 아동 돌봄: 자녀 돌봄에 소요된 모든 시간은 주당 근로시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며, 유급 보육 서비스 사용 시 남성은 근로시간 증가하는 반면 여성의 근로시간은 감소함.
- 노인 돌봄: 전반적으로 노인 돌봄 시간이 길수록 취업 확률과 근로시간 감소하였으며 특히 남성의 경우 취업 가능성에서 더 부정적 영향이 나타남. 연령별로는 36~50세에서 근로시간 감소 영향이 가장 큼.
- 정책적 함의: 미국의 경우 공적 돌봄체계 부족으로 인해 가족 내 아동 및 노인에 대한 비공식 돌봄 부담이 발생하며, 이는 노동시장 참여를 저해함(특히 여성, 중년층, 민간·자영업자에게 영향이 큼). 따라서 정책적으로 유급 가족 돌봄휴가, 공공돌봄 지원 확대, 세제 혜택 등이 필요.

□ 발표3: Birth Order, Gender and Parental Investments in South Korea

- 한국에서 출생 순위가 부모의 교육 투자와 자녀의 시간 사용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
- 분석자료: 한국 아동패널 자료 (Panel Study on Korean Children, PSKC)
 - 한국보육진흥원이 2008년 출생아를 추적한 연례 패널 자료
 - 형제자매가 2명 또는 3명인 가구만 포함 (외동은 제외)
- 분석방법: 최소자승(Ordinary Least Squares; OLS) 회귀분석

- 내생성(endogeneity)과 선택 편의(selection bias) 문제를 완화하기 위해 출산 계획, 태아의 성별에 대한 선호 등 관련 요인을 통제
- 분석결과: 전반적으로 첫째에게 교육비, 학교 활동 참여, 감독 등 교육적 투자가 집중됨. 과거에 비해 자녀의 성별(gender)에 따른 차이는 축소되었으며 출생순위 효과만 유의미하게 유지됨.
- 부모의 자녀 학교생활 관여: 첫째 자녀에 대한 참여도가 가장 높으며 둘째, 셋째로 갈수록 학교 활동(수업 참관, 학부모 회의 등) 참여 감소. 성별 효과는 대부분 유의미하지 않음.
- 사교육비 지출: 첫째에게 가장 많은 금액을 투자. 2자녀 가구에서 둘째의 경우 첫째에 비해 월 \$8~11 적게 지출됨이 확인되었으며 셋째는 온라인 수업 지출도 유의미하게 낮음. 아들의 경우, 딸보다 평균적으로 사교육 지출이 적음 (과거 남아 선호와 상반되는 결과).
- 부모의 감독: 전반적으로 출생순위가 높을수록 더 많이 감독받는 경향이 나타나나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는 항목은 많지 않음.
- 아동의 시간 사용: 둘째·셋째는 첫째보다 학습 시간이 적고 자유 시간이 많음. 특히 셋째는 혼자 있는 시간과 TV 시청 시간이 가장 많음.
- 정책적 함의: 출생순위에 따른 자원 불균형이 여전히 존재할 가능성
- 교육 불평등 및 사회적 이동성(social mobility) 저해 가능성
- Becker and Lewis(1973)의 수량-질 trade-off 이론과 일치
- 기존 남아 선호 기반의 격차는 줄었으나, 장자 우선적 투자 문화는 비교적 유지됨.
- 다자녀 가구에 대한 출생순위별 교육 지원 정책 필요: 둘째·셋째 자녀에 대한 사교육비 보조, 학습 환경 개선, 돌봄 지원 강화 등을 통해 형평성 제고 가능

□ 발표4: What Matter for U.S. Firms' Offering of Generous Maternity Benefits? An Examination of Female Leaders and External Environments

- 미국 기업이 관대한 출산휴가 혜택(maternity benefit)을 제공하는 데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분석
- 특히 여성 리더십의 '역할'에 주목하여, 여성 이사와 여성 CEO의 효과를 비교함으로써 성역할에 기반한 여성적 유인(feminine incentives)과 리더십 역할에 따른 경제적 동기(economic incentives)에 따라 출산휴가 제공 수준이 달라진다는 이론적 틀을 제시함.
- 분석자료: Refinitiv survey data on firm-level maternity benefits
- 미국 기업의 출산휴가 제공 여부 및 수준에 대한 설문조사 기반 자료

- 기업 단위 정보와 여성 CEO 및 여성 이사 비율, 외부 환경 변수 포함
- 분석결과
 - 이사회 여성 임원 비율은 관대한 출산휴가 제공과 강한 양의 상관관계를 보임.
 - 반면 여성 CEO의 존재는 출산휴가 혜택과 통계적 유의한 상관관계가 나타나지 않음.
 - 정치적 진보성(political progressiveness)과 사회적 자본 수준이 높은 지역에서는 기업이 더 관대한 출산휴가를 제공할 가능성이 큰 반면, 지역 사회의 남성성(masculinity)이 강한 경우에는 그 가능성이 작은 경향
- 정책적 함의: 여성 리더십 확대는 기업의 가족친화적 제도 강화를 유도할 수 있음. 반대로 가족친화적 혜택의 제공이 유능한 여성 인재를 유치하는 방안으로 활용되기도 함. 이러한 관계성 측면에서는 기업 외부적인 사회 환경(지역의 사회적·정치적 특성)도 중요한 관련요인임.

3. 학술세션 참석: Inequality and Careers (CSWEP)

□ 일 시: 2025. 6. 21. (토), 10:15~12:00

□ 장 소: San Francisco Marriott Marquis, Juniper

□ 발표자: Beverly Hirtle (Federal Reserve Bank of New York), Lorien A. Rice (Northeastern University), Elena Pellegrini (Boston College), Briana Ballis (University of California, Merced)

□ 발표1: Demographic Differences in Letters of Recommendation for Economics Ph.D. Students

- 경제학 박사과정 지원자들의 추천서에서 나타나는 성별 및 인종 간 차이를 실증 분석
 - 추천서의 언어적 특징이 지원자의 인적 특성과 어떻게 연결되는지 살펴봄으로써, 학계의 채용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편향(bias) 가능성을 조명
- 분석 자료: 미국의 정책연구소에 제출된 2018년부터 2021년까지의 경제학 및 금융학 박사 졸업자 2,200여 명에 대한 추천서 6,400건
- 분석 방법: 자연어처리(Natural Language Processing; NLP) 기법 활용
 - 추천서 본문에서 단어 수, 형용사 사용 빈도, 특정 키워드 출현 등을 분석

- 분석 결과
 - 여성, 흑인, 히스패닉 지원자에 대해 쓰인 추천서는 평균적으로 짧고 덜 긍정적인 단어를 포함하는 경향(예시: brilliant, outstanding 등 긍정적인 단어의 사용 빈도 낮음)
 - 백인 남성 지원자는 더 강한 어조와 적극적인 표현이 사용됨
 - 추천서의 문체 차이는 성별/인종과 무관한 통제 변수들을 고려한 후에도 유의미한 수준으로 나타남.
- 정책적 함의:
 - 추천서가 지원자의 능력과 무관하게 편향된 정보를 전달할 수 있으며, 대학원 등 채용기관은 추천서 해석 시 편향 가능성을 인지해야 함.
 - 편향 가능성을 완화하기 위한 구체적인 제안으로 추천서 작성자와 평가자 대상 교육, 추천서 형식의 표준화 또는 비교 기반 서식 활용 등을 고려할 수 있음.

□ 발표2: The Labor Market Effects of the COVID-19 Pandemic: Differential Impacts at the Intersections of Gender and Race

- 코로나19 팬데믹이 미국 내 성별 및 인종 집단별 노동시장 성과에 미친 영향을 분석
 - 성별과 인종의 교차성(intersectionality)에 주목하여, 팬데믹 기간에 각 집단이 겪은 고용 충격과 회복 양상의 이질성을 규명하고자 함.
- 분석 자료: U.S. Current Population Survey (CPS)
- 분석 방법: 집단별 코로나19 전후를 대조하는 이중차분법
- 분석 결과:
 - 백인 남성에게 비해 히스패닉 여성과 아시아계 여성은 코로나19 초기 실업률이 크게 증가함.
 - 경제활동참가율은 코로나19 초기 흑인 남성에서 가장 크게 하락하였고 이를 회복까지 약 2년 소요. 백인 남성과 여성의 경우에는 감소폭은 작았지만 회복되지 않고 지속적인 하락세를 보였음.
 - 고용률의 초기 감소폭이 가장 컸던 집단은 히스패닉과 아시아계였지만, 다른 집단에 비해 빠르게 반등함. 장기적으로는 흑인 남성, 백인 남성, 백인 여성의 회복 속도가 더뎠던 것으로 나타남.
- 분석 결과: 인종과 성별 등 여러 특성이 교차하는 집단의 노동시장 지표의 장기적 추이를 살펴봄으로써 향후 더 포괄적이고 공정한 노동정책 설계에 유용한 통찰을 제공할 수 있음.

□ 발표3: Wealth Inequality and Labor Mobility: The Job Trap

- 임금근로자의 자산이 고임금 일자리로의 이동 가능성에 미치는 영향을 추정
 - 자산이 적은 근로자가 임금 상승 기회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재 직장을 유지하려는 경향이 있음에 주목하며, 이는
 - 분석 자료: SIPP (Survey of Income and Program Participation)
 - 분석 방법: 고정효과 패널 회귀분석, 이론모형
 - 분석 결과
 - 유동자산이 많은 근로자는 그렇지 않은 근로자보다 더 높은 확률로 이직하며, 이러한 차이는 특히 임금 사다리 하단에서 두드러짐.
 - 이직 시 평균적으로 임금 상승이 동반되므로, 이직하지 않는 것은 경제적 기회의 손실을 의미
 - 임금 상승 기회는 더 높은 이직(해고) 위험을 수반하며, 유동성있는 자산이 부족한 근로자는 이러한 위험을 회피하기 위해 일자리의 상향 이동보다는 고용 안정성을 우선시
 - 정책적 함의
 - 자산의 제약이 노동시장에서의 일자리-근로자 매칭을 비효율적으로 만들고 근로자의 생산성 높은 일자리로의 이동을 저해할 수 있음.
 - 이를 완화하기 위해서는 유동성 제약을 완화하는 금융 지원 정책을 통해 노동시장 효율성을 개선하는 방법을 고려할 수 있음(예: 단기 소득 보전, 이동 보조금, 긴급 유동성 지원 등).
- 발표4: Immigrant Peers and the Short-Run Academic and Long-Run Outcomes of US-Born Students
- 유년기에 이민자(immigrant peers) 친구와 함께 학교를 다닌 경험이 미국 태생 학생들에게 장/단기적으로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분석
 - 기존 연구들은 단기적인 학업 성과에 초점을 둔 반면, 이 논문은 대학 진학, 노동시장 성과, 정치적 행동 등 성인기에 관찰되는 장기 효과에 초점을 두고 분석
 - 분석 자료: 텍사스 주의 출생 기록(Texas birth records 1976 - 1997) + K-12 공립학교 기록(Texas Education Agency) + 성인기 노동시장 및 정치 참여 데이터
 - 분석 방법: 형제 고정효과로 가구 고유 효과(선택 편의 등)를 통제한 회귀분석
 - 이민자 또래 노출은 동일 학년·학교 내 이민자 비율의 누적 평균으로 측정
 - 분석 결과

- 단기 성과: 이민자 친구 비율이 높을수록 읽기와 수학 성적에 소폭 부정적 효과가 나타나지만, 형제 고정효과를 통제하면 효과는 거의 사라짐. 아시아계 친구는 오히려 학업에 긍정적 영향
- 장기 성과: 이민자 친구에 대한 노출은 대학 진학 및 졸업률에 소폭 부정적 영향이 보여주지만, 이 또한 형제 고정효과를 통제하면 효과 축소
- 또래 특성에 따른 이질성: 이민자의 인종·소득수준에 따라 결과가 달라짐. 저소득 히스패닉 이민자는 부정적 효과, 고소득 아시아계 이민자는 긍정적 효과, 흑인 및 백인 이민자는 미미한 효과 초래
- 미국 출신 학생의 소득 수준에 따라서도 이민자 친구의 영향이 다르게 나타남: 저소득층 학생은 저소득 이민자에게 더 민감하게 반응
- 어린 시절 또래 이민자 친구에게 조기 노출되는 것은 장기적으로 대학 진학률, 소득, 정치 성향 등 다양한 성인 결과에 영향을 줌.
- 정책적 함의: 한국도 다문화 사회에 진입하였고 앞으로 이민자와 2세가 증가할 것으로 보이는 만큼, 이와 같은 연구를 정책적 관점에서 수행할 필요가 있겠음.

4. 워크숍 참석: **The Hidden Curriculum: Everything You Weren't Taught in Graduate School About Doing Applied Research**

일 시: 2025. 6. 21. (토), 14:30~16:15

장 소: San Francisco Marriott Marquis, Pacific I

발표자: D. Mark Anderson (Montana State University Bozeman)

주요 내용: 대학원생 및 신진 연구자를 대상으로 정규 교육과정에서 잘 다뤄지지 않는 실증연구 수행방법에 대해 안내하는 강의

○ 좋은 논문을 쓰기 위해서는 넘어야 할 여러 허들이 있음.

- 흥미롭고 중요성이 있는 주제

- 기존 문헌에 대한 기여: 아직 연구되지 않은 틈을 채울 수 있어야 함.

- 가용한 데이터

- 인과효과의 식별방법: 잘 정의된 자연실험(natural experiment) 등

○ 기존 문헌의 틈을 찾기 위한 문헌 조사 방법

- 경제학에 특화된 플랫폼(NBER, JSTORE, EconLit 등)에서부터 먼저 조사를 시작하고, 보다 일반적인 플랫폼(Google Scholar 등)은 후순위로

이용

- 이론 연구와 실증 연구를 분리하여 정리
 - 저명한 저널에 출판된 논문이 우선 순위
 - 실증 연구를 분류: 실증결과(인과효과)의 신뢰성(credibility), 연구 설계(research design) 등을 기준으로 분류
 - 실증연구 주제의 탐색에 있어 흥미로운 가설을 세우는 것에서부터 시작할 것인가, 아니면 인과효과의 식별이 가능한 자연실험을 찾는 것에서부터 시작할 것인가?
 - 학계의 연구자로서 실증근거와 업적을 생산하기 위해서는 자연실험을 찾는 것부터 시작하는 것이 현실적이고 효율적일 것임.
 - 그러나 KDI와 같은 정책연구소의 연구자라면, 엄밀한 대답이 가능한 질문보다는 엄밀한 대답이 어렵더라도 사회적으로 중요한 질문에 대해 대답할 것을 요구받게 되므로, 정책연구는 필연적으로 흥미로운 가설에서부터 시작하게 될 수 밖에 없을 것으로 생각함.
 - 언제 진행 중인 실증연구를 중단 또는 포기해야 하는가?
 - 귀무가설을 기각할 수 없을 때(null effect): 연구의 맥락에서 null effect 자체가 흥미로운 결과인지, 그리고 추정치가 정밀한지(precise) 따져보아야 함.
 - 관찰된 결과를 도출할 수 있는 매커니즘을 설명할 수 없을 때: 매커니즘에 대한 고민은 실증 결과가 나오기 전부터 가능한 한 일찍 시작할 것을 추천. 결국 설득력있는 매커니즘이 도출되지 않는 경우 경제학 저널이 아닌 연관 분야의 다학제적 저널에의 출판도 고려할 수 있음.
 - 서론(introduction) 쓰기에 대한 조언: 서론의 가장 중요한 목표는 연구의 학술적 기여를 밝히는 것임을 염두에 두어야 함.
 - 서론의 구성요소: general motivation, specific motivation, brief description of background, data description, description of identification strategy, description of principal results, roadmap.
 - 기여는 가짓수가 많은 것보다 중요한 1~2개가 있어야 함: 너무 많은 가짓수의 기여를 병렬적으로 열거하는 것은 큰 실수임. 너무 많은 가짓수의 기여는 독자로 하여금 어떤 것이 정말로 중요한지 알기 어렵게 만들고, 과연 저자가 자신의 기여를 잘 이해하고 있는지 의심을 초래하게 됨.
 - 문법을 잘 지키고 오타가 없도록 하는 것은 논문이 신뢰성을 갖도록 하기 위한 매우 중요한 필요조건임.
 - 아래와 같이 잘 쓰여진 기존 논문을 읽고 참고하기를 추천함.
- * Wright, Gavin. 1981. "Cheap Labor and Southern Textiles, 1880-1930."

Quarterly Journal of Economics, 96(4): 605-629.

* Charles, Kerwin et al.. 2009. "Conspicuous Consumption and Race." Quarterly Journal of Economics, 124(2): 425-467.

5. 학술세션 참석: Pay Transparency, Quotas, and Remote Work

□ 일 시: 2025. 6. 22. (일), 08:15~10:00

□ 장 소: San Francisco Marriott Marquis, Pacific F

□ 발표자: Jiawei Lyu (University of Pittsburgh), Meng Song (University of Connecticut), Quy Lam (University of California, Merced)

□ 발표1: Feigning Fairness: The Loss from a Voluntary Gender Quota in Public Service

- 중국 공무원 채용에 도입된 남성을 위해 남녀 동수를 채용하는 성별 할당제의 결과를 인과적으로 추정함. 남성에 대한 역차별 논란으로 도입된 이 제도의 도입 배경과 효과를 분석하여, 역차별 논리로 추진된 대표성 보전 정책이 제도 효율성과 형평성에 어떤 결과를 초래했는지를 밝히는 연구임.
- 분석 자료: 공무원 시험 데이터 및 지역 세수(county tax revenue) 데이터
 - 중국 공무원 채용에 관한 새로운 종합 데이터셋을 구축: 2011년부터 2023년까지의 모든 공무원 시험 공고 총 91,149건을 국가공무원국 시험 포털에서 웹 스크래핑을 통해 수집
 - 부처 및 기관명, 웹사이트, 직무명 및 코드, 직무 분류, 직무 설명, 모집 인원, 근무지, 면접 비율, 자격 요건 등의 세부 정보
 - 2016년 이후 세무국 직무에 대한 지원자 수 및 필기시험 커트라인 점수를 웹 스크래핑으로 수집
 - 분석 대상은 지방 세무국(county-level tax bureaus)이며, 이는 전체 공무원 채용의 절반 이상을 차지함.
- 분석 방법: 매칭 자료를 이용한 이중차분법: 지역별 정책 도입 시점이 다른 점을 활용해 정책 효과를 식별
 - 할당제 도입 배경에 내재된 선택 편향을 통제하기 위해 매칭 기법 활용: 각 지역이 자발적으로 성별쿼터제 도입

○ 분석 결과

- 기존에 여성 공무원 채용 비율이 높았던 지역일수록 남성 할당제를 도입하는 경향이 관찰됨
- 할당제 도입 이후: 여성 대표성 감소, 지원자 필기시험 점수 저하, 공무원 생산성 감소, 세수 감소(카운티 당 연간 약 400만 달러 수준)
- 공정성 약화 및 부패 가능성 증가가 주요 작동 메커니즘으로 보임.

○ 정책적 함의:

- 기존 우위 집단(남성)의 대표성을 유지하려는 성별 균등 정책이 오히려 형평성과 제도 효율성 모두를 훼손할 수 있음.
- 성별 균형 정책의 실제 효과와 방향성은 맥락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정책 설계 시 성별 간 현실 불균형과 채용 구조 전반을 고려해야 함.
- 기계적 평등을 내세우는 정책이 비의도적 결과를 초래할 수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
- 한국의 경우에도 최근 남성에 대한 역차별 논란이 발생하고 있음. 초등학교 교사 등 남성의 롤모델이 부족한 분야가 있다면 남성할당제 등을 고려할 수 있을 것임. 그러나 이 연구가 시사하는 바는, 기존 고위직이 대부분 남성으로 구성되는 등 실제로 충분한 수준의 성평등 또는 다양성이 갖춰지지 않은 상태에서, 역차별 논란에 대응하여 기계적으로 적용된 성별할당제는 효율성도 다양성도 달성하지 못하는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다는 점임.

□ 발표2: The Future of Work: Remote Opportunities and Female Labor Force Participation

- 팬데믹을 계기로 급속히 확산된 재택근무가 장기적으로 여성의 경제활동참가율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를 분석
 - 여성이 재택근무 환경에서 수혜를 얻었는지 혹은 불이익을 받았는지를 평가.
- 분석 자료: 미국 American Community Survey (ACS)
 - 지역 노동시장 단위(Local Labor Market Area, LMA)로 코로나19 전후 재택근무 기회 수준 측정
- 분석 방법: 지역별 재택근무 가능성의 차이를 활용한 지역 간 비교(이중차분법과 사건사 분석방법)
- 분석 결과
 - 재택근무 확대는 여성의 경제활동참가율에 긍정적인 영향: LMA 기준 재택근무 기회가 1 표준편차만큼 증가하면 여성의 경제활동참가율이

0.32%p 증가(어머니는 +0.41%p, 5세 이하 자녀의 어머니는 +0.86%p)

- 연령대가 낮을수록 재택근무 기회의 효과가 큼
- 고학력 어머니가 재택근무의 혜택을 가장 많이 누림
- 반면 저학력 여성은 구조적 제약으로 인해 재택근무의 효과를 온전히 누리지 못함
- 재택근무의 효과는 시간이 지남에 따라 점진적으로 강화될 가능성이 있음 (지속적 제도화에 따른 지연 효과 등)
- 정책적 함의: 고학력 여성에게는 재택근무의 효과가 크게 작동하고, 저학력 여성은 구조적 제약에 직면.
 - 재택근무 인프라 확장 및 제도적 안정화는 여성 고용 확대, 특히 육아기 여성의 노동시장 참여 제고에 기여할 수 있음.

□ 발표3: Wage Transparency and Gender Wage Gap

- 임금 투명성 정책이 공공부문 근로자의 임금수준과 성별 임금격차에 미친 영향 분석
 - 임금 투명성은 많은 국가에서 차별을 해소하기 위해 시행 중인 주요한 정책 수단 중 하나
 - 미국 공공부문 근로자를 분석 대상으로 함.
- 분석 자료: 미국의 각 주에서 공개하고 있는 employee payroll databases
- 분석 방법: 이중차분법
- 분석 결과
 - 여성 근로자는 남성 근로자보다 약 10% 낮은 임금을 받는 지속적인 성별 임금 격차가 관찰됨. 이 격차는 근속연수와 정규직 여부를 통제 한 후에는 약 7~8% 수준으로 좁혀지지만 완전히 해소되지는 않음.
 - 임금 투명성 개혁(Post-Reform 변수)은 남성의 평균 임금이나 전체 임금 구조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남.
- 정책적 함의: 임금 투명성 정책만으로는 고착된 성별 임금 격차를 해소하기 어려움(Baker, 2020; Castilla, 2015).
 - 지속적인 차별 및 암묵적 편향이 임금 결정에 여전히 영향을 미침 (Bertrand, 2018)
 - 직업 분리(occupational segregation) 및 불균등한 승진 기회 같은 구조적 요인은 투명성만으로는 해결되지 않음 (Blau & Kahn, 2017)
 - 여성의 낮은 협상력과 협상 시 불이익에 대한 사회적 제약이 투명성 효과를 제한함 (Babcock et al., 2017; Bowles et al., 2005)
 - 고용주가 전략적으로 임금을 압축하거나 간접적 방식으로 격차를 유지

할 수 있음 (Kricheli-Katz & Regev, 2020)

- 제도적·문화적 변화는 정책 시행보다 느리게 일어나기 때문에 효과 관찰까지 더 긴 시간이 필요함 (Card et al., 2016)

6. 학술세션 참석: 학술세션 참석: Issues in Household Consumption and Savings

□ 일 시: 2025. 6. 22. (일), 14:30~16:15

□ 장 소: San Francisco Marriott Marquis, Foothill A

□ 발표자: Xiangdan Piao (Iwate University), Javier Gardeazabal (University of the Basque Country UPV/EHU), Young Jun Choi (Bank of Korea), Lanlan (Lacey) Chu (St. Catherine University)

□ 발표1: Effects of Households' Energy-Saving Behaviors, Renewable Energy, and Electric Vehicles on Carbon Neutrality

- 일본 가구의 에너지 수요함수를 추정
- 분석 자료: 라쿠텐 리서치(Rakuten Research)에서 수행한 인터넷 설문 조사 자료
- 분석 방법: 순서형 로짓 및 프로빗 모형(ordered logit or probit model)
- 분석 결과
 - 가계의 에너지 절약 행동, 에너지 가격 상승, 재생에너지 사용, 원자력 발전 전기 사용, 그리고 전기차 보유는 모두 가계의 이산화탄소 배출을 줄이는 데 기여
 - 원자력으로부터 전기를 사용하는 가계는 이산화탄소 배출을 69.9%까지 줄일 수 있으며, 재생에너지로 생산된 전기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69.4%까지 감축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남.
 - 화석연료 차량을 보유한 가계는 탄소 배출이 상당히 증가: 화석연료 차량을 보유하고 차량 의존적인 가계의 경우 이산화탄소 배출이 47.2% 증가
 - 에너지 절약 제품과 에너지 절약 행동은 모두 가계의 탄소 배출을 줄이는 효과가 있지만, 절약 행동의 효과는 제한적인 것으로 나타남.
- 정책적 함의: 재생에너지나 원자력 에너지, 전기차의 가계 보급이 탄소 중립 목표를 달성하는 데 핵심적

□ 발표2: Household Consumption Responses to Unanticipated Labor Market Transitions

- 실업과 취업 사이의 전환이 가계소비와 소득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
 - 실업에서 취업으로의 전환의 소비효과는 기존 연구에서 거의 다루어지지 않은 주제로, 이에 대한 실증적 증거를 제공하는 것이 이 연구의 기여.
- 분석 자료: 스페인 가계예산조사(EPF: Encuesta de Presupuestos Familiares) 패널자료
- 분석 방법: 매칭과 이중차분법을 결합한 준모수적 이중차분(Semiparametric DID; Abadie, 2005)
- 분석 결과
 - 실업 → 취업 전환: 소비·소득 증가, 소비 증가폭은 소득의 약 35~40%
 - 취업 → 실업 전환: 소비·소득 감소, 소비 감소폭은 소득의 약 32~51%
 - 비대칭성: 실업 전환 시 소비 감소가 더 큼
 - 소비 항목별 반응: 사치재 비중 증가, 필수재 비중 감소
 - 경기 국면 효과: 확장기엔 취업 효과 ↑, 불황기엔 실업 충격 ↑
- 정책적 함의:
 - 실직 및 재취업과 같은 노동시장 충격에 대한 가계소비 반응은 경기상황과 관련되어 있으며, 정책적 타이밍 조정의 중요성을 시사
 - 노동시장 정책과 소득이전 정책이 소비 안정성에 미치는 효과가 정책적으로 중요한 고려 사항이 될 수 있음.

□ 발표3: The Impact of Experienced Inflation on Housing Demand

- 과거의 인플레이션 경험(Experienced Inflation)이 주거 수요, 특히 주택 구매 의사와 가격 기대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분석
 - 경험적 인플레이션은 가계가 이전에 체감한 물가상승률로, 경제적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주목을 받음. 이 연구는 인플레이션 경험이 기대 인플레이션에 영향을 미치고, 이를 통해 주택 수요를 자극하거나 억제할 수 있다고 주장
- 분석 자료: 한국노동패널조사(KLIPS)
- 분석 방법: 로짓 회귀분석
- 분석 결과: 인플레이션 경험은 주택 구매 확률 증가로 이어지며, 이러한 경향은 특히 30대 이하, 남성, 기혼, 가구원이 많은 가구, 자산규모가 작은 가구일수록 강하게 나타남.

□ 발표4: How Is Financial Knowledge Related to Spending Behavior?

Evidence From U.S. Stimulus Payments During the COVID-19 Pandemic

- 코로나19 기간에 지급된 미국의 소비촉진 지원금의 사용에 관한 개인의 금융 의사결정에 주관적 및 객관적 금융지식이 어떤 역할을 하는지를 탐색
- 분석 자료: 2021 National Financial Capability Study
- 분석 방법: 프로빗 회귀분석
- 분석 결과:
 - 주관적 및 객관적 금융지식 수준이 높은 개인일수록 지원금을 즉각적인 소비(예: 물품 구매, 공과금 납부)에 사용할 가능성이 낮고, 부채 상환, 저축, 주식 투자, 기부 등 장기적 또는 자산 형성 목적에 사용할 가능성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남.
 - 주관적 금융지식이 지원금 사용 방식에 있어 객관적 금융지식보다 더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남.
- 정책적 함의: 금융지식 수준이 높은 사람일수록 소비촉진 지원금을 즉각적으로 사용하지 않는다는 사실은, 소비촉진 지원금 정책을 입안한 동기와는 배치됨. 이는 고소득 가구일수록 소비촉진 지원금의 한계소비 성향이 낮게 나타난다는 기존의 연구결과와도 일관됨. 지원금의 소비진 작효과를 확대하기 위해서는, 금융에 대한 이해도가 높은 개인에게도 소비를 즉각적으로 실현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유인제공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

7. 학술세션 참석: Topics on Private Education, Fertility, and Economic Development in South Korea

일 시: 2025. 6. 23. (월), 08:15~10:00

장 소: San Francisco Marriott Marquis, Pacific E

발표자: Youngju Lim (Chung-Ang University), Jieun Hong (Chung-Ang University), Sejung Oh (University of California, Davis), Songman Kang (Sungkyunkwan University)

발표1: Does Educational Overinvestment Hinder Fertility? Evidence from South Korea

- 높은 사교육비 투자는 한국의 초저출산의 주요 요인임. 이 연구는 사교육 비용이 결혼 및 출산 결정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
- 분석 자료: 한국여성가족패널조사, 시도단위 사교육 가격 지수
- 분석 방법: 생존분석(Survival Analysis)
- 분석 결과: 사교육 가격이 높을수록 출산 시점이 지연됨
 - 사교육 가격 지수가 1%포인트 증가할 경우 첫 출산까지 걸리는 시간이 14% 증가하며, 둘째 출산까지 걸리는 시간도 11% 증가
 - 결혼도 지연되지만 결혼 만족도는 상승
- 정책적 함의: 사교육에 대한 과잉투자가 출산율 저하의 잠재적 원인 중 하나임을 시사
- 분석의 한계 또는 시사점: 처치변수(사교육비)의 외생적인 변화를 이용한 인과분석은 아니므로 분석결과는 상관관계로 이해해야 함.

□ 발표2: Early Private Tutoring: Regional Evidence on Educational Fervor in South Korea

- 지역 내 교육 경쟁 압력이 초등학생의 사교육 투자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분석
- 분석 결과
 - 지역 유급률이 높을수록 초등학생의 사교육 지출과 시간 모두 유의하게 증가: 학업 경쟁이 조기 교육 단계로 확산되고 있음을 시사
 - 반면 중학생의 경우에는 유의미한 효과가 관찰되지 않았음.
 - 고등학생의 경우, 교육 압력 증가에 따라 사교육 시간은 증가하지만 사교육비 지출 규모에는 변화가 없었음: 정책 시행 시점의 불일치나 사교육 시장의 포화 상태에 따른 결과로 이해됨.
 - 대학 경쟁률은 사교육 행태와 유의미한 관련이 없는 것으로 나타남.
- 정책적 함의: 연령이 낮을수록 학업 경쟁 압력이 조기 교육 수요를 유발할 수 있음.

□ 발표3: Parental Gender Norms and College Major Choices

- 부모의 전통적 성역할 태도가 자녀의 대학 전공 선택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
 - 부모의 성 역할 태도를 대리하는 지표로는 부모 출생지의 출생성비 (Sex Ratio at Birth, 1990년대 초반 기준)을 사용
- 분석 자료: 한국노동패널조사
 - 출생성비: 통계청 Vital Statistics 이용
 - 여성 비율이 높은 전공 정의: 해당 연도 기준 여성 지원 비율이 높은

상위 10개 전공

- 분석 방법: 로짓 회귀분석
 - 종속변수: 여성의 경우 여성 편중 전공(상위 10개) 여부 (0/1), 남성은 남성 편중 전공 여부
 - 핵심 독립변수: 부모 출생지의 출생성비
 - 세대 구분: 1985 - 1999년 (이전 세대), 2000 - 2016년 (최근 세대)
- 분석 결과
 - 아버지가 보수적인 성역할 태도를 가질수록 딸이 여성 편중 전공(예: 교육학, 가정학 등)을 선택할 가능성이 유의미하게 증가
 - 그러나 이 효과는 2000년 이후 대학에 진학한 딸들에 대해서는 더 이상 유의미하게 나타나지 않음: 최근으로 올수록 성역할에 대한 부모의 전통적인 고정관념이 감소하였음을 시사
- 정책적 함의: 부모의 보수적 성 고정관념이 자녀의 전공 선택에 실질적 제약을 주었음.
- 분석의 한계: 대리변수인 부모 출생지의 출생성비를 부모의 성역할 태도라고 해석하고 있으나, 이는 여러 다른 대안적인 해석의 가능성이 존재함. 예를 들어 가부장적 사회구조에서 학생의 전공선택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조부모 또는 교사의 선호 및 성역할 태도라고 해석할 수도 있겠음.

□ 발표4: The Impact of a Place-Based Economic Development Policy on Original Residents: Lessons from South Korea's Innovation Cities

- 한국의 혁신도시 정책이 정책 시행 이전 기존 거주자의 고용 및 소득 수준과 건강 상태에 미친 영향을 분석
 - 공공기관 지방 이전 및 지역 인프라 개발이라는 대규모 공간기반(place-based) 정책이 기존 거주민의 삶의 질을 어떻게 변화시켰는지에 주목
- 분석 자료: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전국표본코호트(NHIS-NSC) 데이터
- 분석 방법: 이중차분법, 사건사분석방법
 - 혁신도시로 선정된 지역의 기존 거주자와 선정되지 않은 'runner-up' 지역 주민 비교
- 분석 결과: 경제적 효과는 제한적이었지만, 건강 상태의 개선과 의료 이용 감소가 관찰됨.
 - 경제적 효과 미미: 고용률, 보험료 수준 등의 경제지표에 변화 없음
 - 건강 개선 효과: 생체지표(biomarker) 및 의료 서비스 이용 지표로 측정된 건강상태가 개선됨.

- 정책적 함의: 공간기반 정책은 경제적 지표뿐 아니라 건강 등 비경제적 지표에도 긍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음. 단순히 신규 일자리 창출 등 단순 경제지표로 사업의 성과를 평가하기보다는 삶의 질 개선 및 사회적 복지 측면까지 고려해야 함.

8. 학술세션 참석 및 발표: Effects of Financial Incentives, Financial Distortions, and Financial Risk Tolerance

□ 일 시: 2025. 6. 24. (화), 08:15~10:00

□ 장 소: San Francisco Marriott Marquis, Foothill A

□ 발표자: Anthony Murphy (Federal Reserve Bank of Dallas), MinSub Kim (Korea Development Institute), Efstathia Korkou (City University of New York)

□ 발표1: Household Access to Credit in Low- and Moderate-Income and Banking Desert Areas

- 미국에서는 은행이 저소득 지역 사회에 대출, 투자, 금융 서비스를 공정하게 제공하도록 장려하고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하도록 하기 위하여, 1977년부터 지역사회 재투자법(The Community Reinvestment Act; CRA)을 시행
 - CRA는 은행이 저소득 지역에 대출, 투자, 금융 서비스를 제공하고, 그 성과를 공시하고 연준 등 연방 규제기관으로부터 평가받도록 함.
- 본 연구는 미국의 저소득 및 중간소득(low- and moderate-income; LMI) 가구와 이른바 은행 사막(banking deserts)이라 불리는 지역에 거주하는 가구들이 신용 접근에서 제약을 받고 있는지를 조사
 - 은행 사막: 오프라인 은행 영업점이 없는 지역
- 분석자료: 뉴욕 연준 소비자신용패널자료(CCP)를 이용
- 분석방법: 회귀 단절 모형(regression discontinuity) 및 매칭 회귀분석(matching regression)
- 분석결과: LMI 가구와 비-LMI 가구 간, 또는 은행 사막과 비-사막 지역 간의 가구 대출(모기지, 자동차, 신용카드 대출 잔액)에서 유의미한 차이가 발견되지 않음.
- 정책적 함의: 본 논문의 분석 결과는 아래와 같은 두 가지 상반된 해석 가능성을 제기

- CRA가 LMI 가구의 신용 접근을 개선하지 못하고 있을 수 있음.
- CRA가 MI 가구와 비-LMI 가구 간 신용 결과의 평준화를 성공적으로 이끌었을 수 있음.
- 분석의 한계 및 추후 시사점: 본 연구의 정책적 함의를 명확히 하기 위해서는, 집행 강도 또는 자격 기준 측면에서 CRA의 정책의 외생적 변화를 활용하거나, LMI 지역과 비-LMI 지역 간 이주 가구를 활용한 분석을 고려할 것을 제안함.
- 한국에의 시사점: 한국에서도 금융위원회에서 매년 지역재투자 평가(2018년 도입, 2020년부터 시행)를 발표함. 고령화와 지역균형발전 측면에서 사업의 중요성이 큰 것으로 판단됨. 미국의 지역재투자법은 그 효과성에 논란이 있는 상황이므로, 한국의 사례도 앞으로 엄밀한 효과성 분석이 수행될 필요가 있을 것으로 사료됨.

□ 발표2: Stimulating the Economy via Cashback: Evidence from Credit Data in South Korea

- KDI에서 수행한 바 있는 정책용역 과제(상생소비지원금 사업의 효과 분석, 2022)의 연구 결과를 심화 발전시키는 과정에 있는 논문이며, 직접 현금 지원 방법과 캐시백 인센티브를 통한 소비 유도 정책의 정책의 효과와 수혜 집단을 비교 분석하는 연구임
- 한국 정부의 코로나19 대응 경기부양책으로 제공된 신용카드 캐시백 보상이 가계 소비를 촉진하는 보다 효율적이고 효과적인 재정정책 수단일 수 있는지를 평가
 - 상생소비지원금: 2021년 9월, 한국 정부는 2021년 2분기 월평균 신용카드 사용액보다 10월 또는 11월 사용액이 많은 개인을 대상으로 최대 20만 원의 캐시백을 지급
- 분석자료: 신용카드 사용 데이터와 신용정보를 결합한 새로운 데이터베이스를 구축
- 분석방법: 삼중차분(triple-differences) 사건사 분석방법을 통해 캐시백 수혜 가구와 미수혜 가구의 카드소비를 대조
- 분석결과: 상생소비지원금 사업에 참여한 수혜가구의 카드소비가 크게 증가하여, 보편적인 현금지원에 비해 캐시백 형태의 선별적 지원의 소비진작효과가 큰 것으로 나타남.
- 분석의 한계: 수혜가구는 정책(상생소비지원금 사업)에 스스로 참여했다는 점에서 자기선택(self-selection)으로 인한 편향성 문제가 있음을 시사하는 실증 증거가 확인되었으며, 도구변수 추정법 등 이를 보완하기 위한 보완분석이 요구됨.

- 정책적 시사점: 한정된 재정으로 소비진작을 위한 지원금 정책을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해서는, 전체 가구 대상의 보편적 현금지급 방식보다는 한계소비성향이 높은 소비자 집단을 대상으로 선별적인 지원 방식이 효율성 측면에서 바람직하며, 캐시백 방식의 지원은 이러한 선별 지원의 좋은 예시가 될 수 있음.
- 발표2 내용에 대한 지정 토론자(Efstathia Korkou)의 주요 코멘트
- 연구의 강점: 주제가 참신하고 흥미롭고, 글도 잘 쓰여 있음. 저자가 KDI 소속인 만큼, 실제 정책에 피드백을 제공할 수 있다는 점에서 매우 중요함
 - 연구 설계 관련 의견
 - 캐시백 조건의 복잡성이 주요 식별 이슈임: 실제 소비 증가인지, 혹은 조건 충족을 위한 소비 시점 조정인지 구분이 어려움
 - 다른 카드사 사용자의 정보 부재: 신한카드 데이터만 사용했는데, 신한카드 점유율은 약 18% 수준으로 대표성 문제가 제기될 수 있음. 타 카드사 데이터 확보가 어렵다면, 신한카드 사용자 특성을 분석하여 대표성 검토 필요
 - 개인 vs 가구 단위 분석: 지급은 개인 단위였지만, 가구 단위로 소비를 조정했을 가능성 있음. 1인 가구만을 대상으로 한 분석을 통해 보다 명확한 효과의 식별이 가능해 보임.
 - 정책적/학문적 논의 확장 제안
 - 한국 외 국가들과의 비교 연구 필요
 - 문헌 리뷰 보완: 미국 등 타국의 신용카드 기반 부양책과 비교해 논문의 범용성 강화. 유사 사례(특히 신용카드 기반 소비 촉진 정책)에 대한 문헌이 포함된다면 유용할 것임.
 - 여타 세션 참석자의 코멘트: 현금 지급이 아닌 캐시백일 경우 소비가 다음 분기로 이월될 수 있음. 이를 검증하기 위해 내구재 소비 비중 변화를 확인할 것을 제안. 만약 내구재 소비가 크게 증가한 것이 아니라면, 진정한 소비 증가로 볼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됨.
- 발표3: Financial Risk Tolerance of Same-Sex Couples in the United States
- 미국 동성과 이성커플의 금융 위험감수성향(financial risk tolerance)을 추정하는 연구
 - 동성커플의 혼인 여부 및 성별에 따른 이질성 분석
 - 분석자료: 소비자금융조사(Survey of Consumer Finances; SCF)의 마이

크로데이터와 횡단면 자료를 활용

- SCF에는 0부터 10까지의 단위로 개인의 위험감수성향을 측정할 수 있는 문항이 제공됨.
- 혼인 여부, 동거 여부, 성별에 따라 커플 유형을 8개로 분류
- 분석방법: 로짓 회귀분석 및 최소자승법 회귀분석
- 주요 분석결과
 - 전반적으로 남성이 여성보다 더 높은 금융 위험감수 성향을 가진 것으로 나타나며, 이러한 경향은 동성 커플, 그 중에서도 남성-남성 커플에서 특히 크게 나타남.
 - 동성 여성 커플은 모든 유형 중 가장 낮은 금융 위험감수 성향을 보임.
 - 고학력, 고소득자일수록 금융 위험감수 성향이 높음.
 - 고령자 및 소수 인종(흑인, 아시아계 등)은 위험감수 성향이 낮음.
- 분석의 한계: 동성 커플 표본의 크기(172쌍)가 제한적이어서 표본의 대표성과 추정치의 정밀성 측면에서 한계를 노정
- 추후 분석 방향: 자기보고(self-reporting)된 위험감수성향과 실제 투자 행태가 일치하는 지 여부, 금융 지식, 성역할, 사회적 편견 등과 연계된 분석이 추가된다면 결과를 이해하고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하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됨.



학술세션 발표자: Anthony Murphy (Federal Reserve Bank of Dallas), Efstathia Korkou (City University of New York), MinSub Kim (Korea Development Institute)